

#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599
----------	------

발의연월일 : 2025. 4. 4.

발 의 자 : 김윤덕 · 임오경 · 조계원  
윤준병 · 이춘석 · 이원택  
김교홍 · 문진석 · 홍기원  
이수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폭증과 치매유병률의 상승에 따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1년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었음.

그런데 “어리석다”는 의미를 지닌 “치매”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매 진단이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치매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치료 적기를 놓치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치매관리”의 내용을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지원 체계 마련, 환자 관리·돌봄 전문 수행기관 및 인력 확충 등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보호·지원과 관련 인프라 확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

고, “치매”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며, 신경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신경인지장애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고 신경인지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경인지장애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진단 및 치료·돌봄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18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관리 전문인력과 신경인지장애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교육·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등 신경인지장애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

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신경인지장애돌봄기관을 지정하고 신경인지장애환자와 신경인지장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경인지장애의 예방,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신경인지장애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신경인지장애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경인지장애”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파악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신경인지장애환자”란 신경인지장애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

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신경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신경인지장애관리”란 신경인지장애의 예방과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신경인지장애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인프라 확충 등을 말한다.

4.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21조의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

나. 제22조의 광역신경인지장애센터

다. 제23조의 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

라. 제24조의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

마. 제25조의 신경인지장애돌봄기관

바. 제26조의 신경인지장애안심병원

사. 제27조의 공립요양병원

아. 그 밖에 제3조제2항의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신경인지장애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고 신경인지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신

경인지장애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신경인지장애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예방·관리 및 치료와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경인지장애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경인지장애관리 및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신경인지장애극복의 날) ① 신경인지장애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신경인지장애에 관한 인식개선 및 극복 등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신경인지장애극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2장 신경인지장애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신경인지장애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신경인지장애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경인지장애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경인지장애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제12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신경인지장애에 관한 홍보·교육
5. 신경인지장애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신경인지장애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8. 신경인지장애관리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 조성
9. 지역사회중심의 신경인지장애 관리 및 신경인지장애환자 돌봄
10. 그 밖에 신경인지장애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신경인지장애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도지사가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신경인지장애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신경인지장애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신경인지장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신경인지장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신경인지장애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신경인지장애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고,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신경인지장애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신경인지장애관리 등

#### 제1절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

제11조(신경인지장애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신경인지장애 연구·개발 사업(이하 “신경인지장애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신경인지장애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신경인지장애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신경인지장애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정보통신기술 등 활용 방안 연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

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신경인지장애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신경인지장애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신경인지장애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신경인지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신경인지장애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경인지장애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경인지장애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신경인지장애 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 발생의 원인 규

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신경인지장애환자의 비용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진단 및 치료·돌봄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신경인지장애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경인지장애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취업·자원봉사 등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취업알선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사회참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사회 거주·치료·돌봄 등 통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전문인력등의 양성·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관리 전문인력 및 신경인지장애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등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등의 범위, 양성·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교육·관리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관리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절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수행기관

제21조(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이하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2. 신경인지장애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3. 신경인지장애연구사업 지원
4.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5. 제16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6. 제22조에 따른 광역신경인지장애센터 및 제24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 업무의 지원
7. 제23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의 업무 지원
8. 제28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등록통계사업 지원
9. 제29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지원
10. 신경인지장애환자와 그 가족, 제2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11. 신경인지장애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2. 그 밖에 신경인지장애관리 및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광역신경인지장애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신경인지장애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신경인지장애센터(이하 “광역신경인지장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 계획 수립의 지원
  2. 신경인지장애 연구
  3. 신경인지장애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4. 신경인지장애관리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5. 제16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6.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7. 제2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및 활동 지원
  8. 제24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9. 제25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돌봄기관 관리 및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신경인지장애 관련 업무
- ② 시·도지사는 광역신경인지장애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광역신경인지장애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 인지장애예방, 신경인지장애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 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이하 “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경인지장애에 관한 정보제공
2. 신경인지장애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3. 신경인지장애환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신경인지장애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신경인지장애예방과 신경인지장애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이하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경인지장애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신경인지장애환자의 등록·관리
3. 신경인지장애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신경인지장애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신경인지장애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신경인지장애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
7. 제2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동 지원
8. 제16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10. 신경인지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1.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경인지장애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의 장은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에 신경인지

장애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의 시설·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신경인지장애돌봄기관의 지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경인지장애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신경인지장애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신경인지장애돌봄기관으로 본다.

1.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의 업무 안내
2. 신경인지장애환자와 신경인지장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
3. 신경인지장애환자 전용쉼터 운영
4.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경인지장애돌봄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경인지장애돌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신경인지장애안심병원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신경인지장애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신경인지장애안심병원(이하 “신경인지장애안심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신경인지장애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 신청하면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경인지장애안심병원이 신경인지장애전문병동을 설치·운영하거나 신경인지장애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력·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신경인지장애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신경인지장애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신경인지장애안심병원 지정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

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4장 신경인지장애정보시스템 등

제28조(신경인지장애등록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의 발생과 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사업(이하 “신경인지장애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신경인지장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경인지장애 관련 사업과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경인지장애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3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신경인지장애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신경인지장애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신경인지장애검진사업
2.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3. 제14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환자의 비용 지원사업
4. 제15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5. 제16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6. 제17조에 따른 사회참여 지원
7. 제18조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치료·돌봄 등 통합 지원
8. 전문인력등의 양성에 관한 업무
9. 제2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및 활동 지원 업무
10.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의 업무

11. 신경인지장애등록통계사업

12. 제29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3. 그 밖에 신경인지장애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료 제공 요청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보칙

제31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경인지장애연구사업, 신경인지장애검진사업,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제15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7조에 따른 사회참여 지원, 제18조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치료·돌봄 등 통합 지원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
2. 전문인력등의 양성·관리 및 제2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관리 및 활동 지원에 드는 비용
3.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 광역신경인지장애센터, 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4.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5.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신경인지장애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장 벌칙

제34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치매관리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경인지장애관리종합계획으로 본다.

제4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

신경인지장애관리위원회로 본다.

제5조(중앙치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치매센터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로 본다.

제6조(광역치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광역치매센터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역신경인지장애센터로 본다.

제7조(치매상담전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상담전화센터로 본다.

제8조(치매안심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로 본다.

제9조(치매안심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안심병원으로 본다.

제10조(공립요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으로 본다.

제11조(치매정보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경인지장

애정보시스템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경인지장애”란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경인지장애를 말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치매”를 각각 “신경인지장애”로 한다.

제39조의17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치매”를 “신경인지장애”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경인지장애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치매”를 “신경인지장애”로 한다.

③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치매관리법」”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치매환자”를 “신경인지장애환자”로 한다.

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치매”를 “신경인지장애”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치매관리법」 제10조제6항 및 제17조제3항”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및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⑦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경인지장애정보시스템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치매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치매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